



주간통일정세 2014-10(2014.03.03~03.0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1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전자설비 생산공장 현지지도(3/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약전(弱電)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의 생산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현실에서 큰 은(보람있는 결과)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요도 대단히 높다"라고 치하하고 "지난 기간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데 있다"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미사일부품 공장 시찰...제품 독자개발 강조(3/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약전(弱電)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3일 보도함.
 - 평양약전기계공장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있으며, 미사일 등 군사장비에 필요한 전자 설비를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짐.
- **北, 대의원 선거 앞두고 선전·선동 강화(3/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4일 "전국 각지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들과 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 선전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조직적으로 벌여) 온 나라가 선거 분위기로 들끓게 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일꾼들과 선동원들은 공장과 건설장, 협동벌(농촌) 가두 인민반들에서 선전선동 사업을 참신하게 전개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선거자들에게 대의원 선거의 의의와 공화국 정권의 위력, 조선의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해 해설해주고 있다"고 소개함.
- **北신문, 선전간부 독려..."김정은 받들고 대중과 함께"(3/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1면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제시한 구호인 '당 선전일꾼들은 항일유격대 나팔수가 되자'를 제목으로 글을 게재함.
 - 신문은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우리 당 선전일꾼들은 항일유격대 나팔수 처럼 원수님(김정은)의 사상과 의도를 받드는 맨 앞장에 자기 위치를 확고히 정하고 당 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로 삶을 빛내어나



가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판문점 시찰 2주년 맞아 '통일의지' 부각(3/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최전방 초소에 새겨진 위대한 애국 의지는 머지않아 통일을 안아올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2012년 3월 3일 김 제1위원장의 판문점 시찰을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오늘날 "조국통일 위업이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김 제1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굳게 다지신 철석의 의지의 빛나는 실현"이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찰하겠다는 신념을 지닌 김 제1위원장이 있어 "조국통일의 아침은 머지않아 밝아오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신문 "강력한 자위력이 한반도에 평화 보장"(3/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5일 '강력한 자위적 힘은 평화수호를 위한 보검'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강력한 자위적 힘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수호를 위한 보검"이라며 "정치적 독립도 경제적 자립도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라크 사태를 예로 들면서 "미국은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무력침공으로 이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어 놓았다"라며 "총대를 쥘 버리면(함부로 내버리면) 순식간에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고 만다"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침략 무력을 계속 증강배치하는 것은 바로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라며 "국방력 강화는 나라와 민족의 최대 중대사"이며,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전쟁 역제력에 의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있다"라고 주장함.
- **北 최룡해, 지난달 말 김정은 밀착수행 확인(3/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5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2014년 1~2월)'라는 제목의 새로 제작한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최룡해가 지난달 김정은 제1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는 모습을 내보냄.
 - 김 제1위원장의 포사격 경기대회 참관 장면에서는 최룡해 외에도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의 모습이 확인됨.
-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등록 완료(3/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 추천·등록을 완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함.
 - 중앙선거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보도'에서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들에서 추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을 해당 구 선거위원



회들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정확히 등록하였음을 보도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시대 첫 대의원선거 임박…분위기 '후끈'(3/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애국헌신으로 공화국의 위력 떨치시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인민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6일 '참다운 인민의 주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군부대 비행훈련 지도…최룡해 수행(3/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중흡7연대칭호를 받은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박정천 포병사령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홍영칠·마원춘 당 부부장이 수행함.
-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 공시(3/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분구 선거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공시했다"라고 전함.
- **조선신보 "총련 간부 5명 北 대의원 후보로 선출"(3/7, 조선신보)**
 - 북한이 허종만 의장 등 5명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를 오는 9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로 선출했다고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7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 량수정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 고문,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강추련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장이 지난 4일 제13기 대의원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힘.
- **北, 여성의 날 맞아 김정은에 충성 강조(3/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방송은 8일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3·8 국제부녀절' 104주년을 기념한 중앙보고회를 열었다고 전함.
 - 보고회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진 내각 부총리, 리영수 당 부장 등이 참석함.
 - 노동신문도 1면 사설 '최후 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여성의



혁명적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를 통해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혁명의 제일 생명이며 조선여성들의 사상정신적 품모의 근본핵"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을 받들 것을 주장함.

● 北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마무리...권력집단 변화 주목(3/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9일 "오후 6시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선거자들을 제외하고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들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옥 당 제1부부장, 황병서 당 부부장과 친여동생 김여정을 대동하고 고급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에 마련된 제105호 선거구 제43호 분구 투표소에서 투표함.

■ 김정은동향

- 3/3,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약전기계공장 현지지도(3.3,중앙통신·중앙방송)
- 강관일 · 황병서 · 홍영철(黨 부부장들) 동행
- 3/7,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 비행훈련 지도 및 군부대 시찰(3.7,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장정남, 윤동현, 리병철, 박정천, 한광상, 황병서, 홍영철, 마원춘 동행
- 3/9,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정치대학에 마련된 제105호구 제43호분구 선거장에서 투표를 하고 대학을 시찰(3.9,중앙방송·중앙통신)
- 최룡해(총정치국장), 김경옥, 황병서, 김여정 동행
- 김정은은 인민군 제855군부대 부대장 '김광혁'에게 투표를 하고 후보자와 담화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들과 선거위원회의 선거 선전사업으로 온 나라가 선거 분위기로 들끓고 있다'며 '각지의 선거 활동' 보도(3.3, 중앙통신)
- 黨 선전일꾼들은 '김정은이 제시한 구호(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당 선전일꾼들은 항일유격대의 나팔수가 되자!)를 틀어쥐고 항일유격대의 정치일꾼, 선전일꾼들처럼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의 기관차, 척후병 역할수행'을 주문(3.4,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분구선거위원회들,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 공시 및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선거장 설치(3.7,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3월 6일 이집트 신임 내각 수상에게 축전(3.8,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의춘(외무상), 3월 6일 재임된 이집트 외무상에게 축전(3.8,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이번 선거는 우리(北)의 최고주권기관을 참다운 인민의 대표들로 꾸리고 공화국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며 '모든 선거자들은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3.9,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나. 경제

- 세계식량계획 "北 2월 배급량 최근 1년 중 최고"(3/4, 조선중앙방송)
 - 지난달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함.
 - 디르크 슈테겐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VOA에 북한 당국이 지난 2월 주민 한 명당 하루 42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힘.
 - 한편, 슈테겐 소장은 스위스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지원받은 분유 400t과 식용유 833t, 옥수수 1천80t, 쌀 200t이 이달 말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제적십자자연맹, 작년 대북사업 '보건' 분야 집중"(3/4,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이 지난해 대북사업에서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 IFRC는 3일 내놓은 '2013년 3·4분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북 사업 예산 664만 달러(약 71억원) 중 36%인 240만 달러(약 25억7천만원)를 보건 분야에 사용,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힘.
- 北 '토지개혁' 단행 68주년 맞아 농업성과 독려(3/5,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5일 1면에 실은 사설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에서 토지개혁 조치에 대해 "농민들의 처지와 운명 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고 우리나라 토지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2면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내세워 주시여'라는 글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한 과정을 소개하고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과 천민군민의 투쟁으로 이 땅 위에 강성국가의 새봄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역설함.

● **몽골, 북한 나선특구에 석탄 2만t 수출(3/6, 몬차메)**

- 6일(현지시간) 몽골 통신사 몬차메에 따르면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 콘퍼런스 '트랜짓 몽골리아(Transit Mongolia)'에서 북한과 몽골 사이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짐.
- 몽골-러시아 합작회사인 '울란바타르 철도'의 에르데네불간 부회장은 6일 몽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3분기부터 북한 나선특구에 석탄 2만t을 시험적으로 수출하게 됐다"고 밝힘.

■ 기타 (대내 경제)

- 함흥철도국, 2.8비날론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에 석탄 집중 수송(3.3, 중앙방송)
- 농업부문의 올해 농사차비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110% 및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선철 생산계획 149% 등 건설·금속·화학·철도운수·석탄·임업부문 등 '인민경제 각 부문의 2월 계획 성과적 완수' 보도(3.4, 평양방송·중앙방송)
- '토지개혁법령' 발표 68돌 즈음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만풍년의 새 역사를 펼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것이 당의 의도'라며 '전당, 전국, 전민의 농촌지원으로 만풍년의 노랫소리 울려 퍼지게 하자'고 독려(3.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만경대구역에 '버섯공장이 건설'되어 대대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3.5, 중앙방송)



다. 군사

- **北, 동해안서 탄도미사일 또 발사...사거리 500km이상(3/3,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오전 6시19분에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발사 거리는 500여km였다"고 밝혔다.
 - 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항행 정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낙하궤적을 분석한 결과 낙하지점이 모두 일본 쪽에 가깝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발 모두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지난 일본 JADIZ 내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 **"北, 작년 무기 수출액 1천만弗"(3/4,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의 방위장비 수출액이 1천100만 달러(약 117억8천만원) 규모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세계적인 군사 전문 컨설팅업체 IHS를 인용해 4일 보도함.
 - 또한 지난해 북한의 무기 수입액은 6천300만 달러(약 674억5천만원)로 집계됐다고 전함.

- **北 "로켓 발사는 자위적 행동...'도발' 아니다"(3/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일 발표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달 21일~이달 4일 '로켓 발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군사행동은 예외 없이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 우리의 영토를 위주로 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정의의 자위적 행동"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미국이 이번 훈련을 '도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당치않은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로켓 발사를 구실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 **"北, 정밀도 향상 KN-02 미사일 100여기 보유"(3/5,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정밀도가 향상된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0여기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군 당국은 'KN-02 미사일에 대한 위협평가'를 통해 북한이 KN-02 미사일의 최대사거리를 170km까지로 늘렸으며 미사일도 10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최근 분석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5일 밝힘.
 - 이 소식통은 "KN-02 최대사거리가 120km에서 170km로 늘어났고 차량에 장착하는 미사일 발사대(TEL)도 30여대를 실전 배치했다"면서 "실



전 배치된 발사대 규모를 고려하면 유도탄(미사일)은 100여기에 이른다"고 전함.

- 소식통은 "KN-02는 북한이 처음으로 고체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한 미사일로 발사 준비와 재장전 시간이 짧다"면서 "전방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고도 평택~원주 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고아 보호정책 본격화되나...입양 독려도(3/3,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의 밝은 미래'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은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며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각별한 사랑을 기울이고 계신다"며 김 제1위원장의 '고아 사랑'을 부각함.
- 또한 조선신보는 김 제1위원장의 보육원 방문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보육 및 교육교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함.

● 북한도 봄철 황사 대책 강구(3/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북한 기상수문국이 이달부터 5월 말 사이 2~3차례의 황사를 예고했다며 이에 따라 황사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함.

● 北,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시작(3/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은정과학지구에 과학자 주택단지를 건설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름을 '위성과학자거리'로 직접 지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위성과학자거리를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완공하라는 '전투명령'을 줬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 대북농업지원 大母 김필주에 명예박사 학위(3/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지난 20여 년간 대북 농업지원 활동을 해온 재미동포 농학자 김필주(77)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생명실험개발연구원 원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김일성대·김책공대 마크에 영문 표기(3/1; 3/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8일 김일성대의 마크와 깃발이 새로 제정됐다고 "마크 밑부분에는 지식의 상징인 펜촉을 형상화했으며 대학 명칭을 영어 대문자로 새겼다"고 밝힘.
- 앞서 조선신보는 지난 1일 김책공대가 마크를 새로 만든 사실을 전하며 마크에 '인공지구위성'을 형상화하고 대학 명칭을 영문으로 새겼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북한 여자 역도 선수 리성금이 4일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남녀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 수립(3.5, 조선중앙통신)
- 北 김지향·리금희 선수, '대만 국제마라톤경기대회' 여자 마라톤경기에서 1위와 3위를 수상하고 3월 3일 귀환(3.3, 중앙통신)
- 北, 3월 3일 제29차 '평양시 과학기술축전(3.3~7)' 개막(3.5, 중앙통신)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회안탄광병원, 탄부들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진행(3.5, 평양방송)
-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의 정신을 출판보도선전에 구현하기 위한 연구토론회, 3월 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3.7, 중앙통신)
 -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리영식(노동신문사 책임주필), 황영보(조선중앙방송위원장), 리영철(노동당출판사 사장), 정리종(민주조선사 책임주필), 최순철(청년전위신문사 책임주필) 등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참가
- 제29차 평양시 과학기술축전, 3.3~7 진행(3.7, 중앙통신 · 평양방송)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신문, '키리졸브' 겨냥 美 비난..."남북대결 책동"(3/3,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3일 '반외세 자주화의 가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는 논설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군사적 도발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난 2월 초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과 '키 리졸브 연습'을 대표적 사례로 꼽음.
 - 논설은 또 남북대결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의 산물이라며 "지금 미국은 북과 남이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3일 '핵위협과 도발의 장본인'이라는 글에서도 B-52 전략폭격기 출격과 관련해 "미국은 반공화국 핵소동으로 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뒤엎으려고 꾀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일본, 오늘 1년7개월 만에 적십자회담(3/3, 교도통신)
 -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 적십자 회담에서 북한과 일본 외교 당국자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선양발로 보도함.



- 양측은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의 북한 내 묘소 참배 허용 문제를 주 의제로 협의하지만, 북일 정부 당국자가 양측 대표단에 포함된 만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일 국교정상화 등을 의제로 하는 정부 간 공식 회담의 재개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 "日, 북일 비공식협에서 납치문제 제기"(3/4, 산케이신문)

- 일본이 3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 적십자회담을 계기로 가진 북한과의 당국자 간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4일 보도함.

● 北신문, 日 '고노담화 재검토' 비난..."성범죄 부정"(3/4,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4일 일본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간으로서 도덕적 체면을 쥘 버리고(함부로 버리고) 있다"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4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은 최근 고노 담화의 내용을 뒤집음으로써 일본군 성 노예 범죄를 역사의 흑막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매체, 美 핵잠수함 부산 입항 비난..."핵전쟁 책동"(3/4,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우리민족끼리는 4일 논평에서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은 "북침 전쟁 소동이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서 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 공갈이자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북침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강조함.
- 노동신문도 4일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군사훈련에 미 핵잠수함이 동원된다며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변질 수 있는 위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北통신, 유엔보고서 또 비난..."미국이 인권침해국"(3/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달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거듭 비난하며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100% 날조된 것인데다가 그것을 꾸며낸 나라들부터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인권의 최후진국들"이라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인권 유린국"이라고 밝힘.



- **北 박봉주, 中 '쿤밍테러'에 위로 전문(3/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4일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최근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신문, 한미군사훈련 거듭 비난..."美는 철천지원수"(3/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은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수'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훈련이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미국에 훈련 중단을 요구함.
 - 신문은 '미제원수들에 대한 적개심 하늘땅을 진감한다'라는 제목으로 핵잠수함 입항에 분개하는 각계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미제 침략선들이 다시는 내 조국의 푸른 바다에 기어들지 못하게 모조리 수장시켜버리고야 말 것" 등의 발언을 전함.
- **北 "美, 세계 최대 인권유린국" 연일 집중 공세(3/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6일 '이란 외무성, 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 규탄 배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란 외무성이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자체가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를 감행"했으며, "미국은 인권 문제를 두고 다른 나라들에 설교할 자격도 없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함.
- **조선신보 "북일 당국회담 개최, 日 태도에 달려"(3/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일 '<지속적인 대화의 틀> 마련할 기회/정부 당국자가 동석한 조일 적십자회담'이라는 글에서 이번 적십자회담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방북 당시 발표된 '평양선언'에 일본인 유골문제가 상정됐지만, 그 후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평양선언에 기초해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풀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조선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
- **北 노동신문, 미국 '승냥이'에 비유해 맹비난(3/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2면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자위적 훈련"이라고 주장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에 대한 각계 반응을 소개할 때 "승냥이를 길들인 조교사는 없다.", "미제승냥이는 오직 총대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제목을 붙이는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승냥이에 빗댄.
- **北, 美의 대남 무기수출 비난..."한반도 평화 파괴"(3/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논평에서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1억 2천300만 달러(약 1천300억원)의 함선용 자동포사격장치를 비롯한 첨단 군사장비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무기 판매는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지



■ 기타 (대외 일반)

- 北, "관광객으로 입국(2.18)하여 반공화국 종교모략책동을 감행한 호주인 '존 쇼트'를 단속,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며 '공화국의 관대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추방하기로 하였다'고 '추방 결정' 보도(3.3, 중앙통신)
- 日 아베 총리의 발언(北의 위협을 대비해 미사일방위체계 수립과 집단적자위권행사 필요) 관련 "우리(北)의 '위협'을 여론화하여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술책"이며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속심"이라고 비난(3.3, 중앙통신·평양방송·노동신문)
- 김영일(黨 비서), 3.4 방북 중인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 대표단(단장 : 조나단 포웰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과 담화(3.4, 중앙통신·평양방송)
 - 박근광(黨 부부장) 및 '프란츠 폰 다니켄(스위스 외무성 前 국무비서)' 등 참가
- 美 해군 군함에 '레이저 포' 실전배치 계획 등을 전하며 '미국의 전쟁장비 개발 책동은 세계적인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부채질하고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비난(3.4,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에 의해 駐태국 北대사에 '문성모' 임명(3.5,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주한미군 무력을 제외(2.26 美국방성 부장관대리의 발언)'한 해외 주둔 미군무력의 감축'을 발표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대조선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흥심에서였다"고 비난(3.5, 평양방송)
- 강석주(내각 부총리), 3월 6일 유럽의 여러 정당 출신 정치인대표단(단장: 조나단 포웰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3.6, 중앙통신)
- 러시아 외무성 순회대사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3.7 평양 도착(3.7, 중앙통신·평양방송)
- 미국 등 국가들의 최근 '北 미사일발사' 지적(저강도 도발·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 등)에 대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침야망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3.7,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부시 前 미국 대통령의 방한 중 발언(北 인권문제, 제재 등)에 대해 '北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부시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수'라고 비난(3.9,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일본의 '과거사 부정·왜곡'을 지적하고 "반인륜적 범죄에는 절대로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은 과거범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는 것으로써 역사의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3.9,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억류 호주 선교사 추방 결정... "범죄 인정해 용서" (3/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억류 중이던 호주 선교사 존 쇼트(75) 씨를 추방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2월 18일 관광객으로 입국했던 쇼트를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쇼트는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에 평양의 불교 절간을 참관하는 기회를 이용해 종교선전물을 몰래 뿌렸다고 억류 이유를 밝힘.
 - 이어 쇼트는 이번 행위가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 신뢰심을 심히 모독한 범죄이며 종교를 몰래 유포한 것이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관대하게 용서해주기를 간청했다"고 말함.

- **北, 방사포 '무력시위'...오늘만 총 7발 발사(3/4, 연합뉴스)**
 - 북한이 4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4시17분부터 5시7분까지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신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북한은 4일 오전 6시께는 24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전함.

- **정부, 北에 '12일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3/5, 연합뉴스)**
 - 정부는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회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 부대변인은 "우리측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지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측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해 우리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北 "환경.분위기 조성안됐다"...적십자 실무접촉 거부(3/6, 연합뉴스)**
 - 북한이 6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6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내온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함.



- **靑 "표현자유 법적근거없이 제한못해" 北에 답신(3/6, 연합뉴스)**
 - 청와대는 6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답신을 보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함.

- **정부, 北에 "적십자 실무접촉 호응촉구" 통지문 발송(3/7, 연합뉴스)**
 - 정부는 7일 대한적십자 총재 명의의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북측이 우리측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또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간에 논의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2·5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이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북측이 우리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가동중단 전 상태 회복(3/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개성공단의 지난해 12월 생산액은 3천529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 3천642만 달러의 94%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고 보도함.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2천여명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인 지난해 3월의 5만3천여명 수준을 회복했으며, 3월 6일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사 가운데 1곳을 제외한 122곳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이산가족 상봉자 내세워 '南선물 갈취설' 반박(3/8~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9일 북한이 지난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을 내세워 이번 행사에 관한 탈북자단체의 주장을 반박함.
 - 상봉 행사에 참가한 북쪽 이산가족 김모 씨는 북한 당국이 행사 직후 북쪽 참가자들에게 사상교육을 하고 남쪽 가족들이 전달한 선물을 빼앗았다는 설에 대해 "정말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우리민족끼리'에 밝힘.
 - 앞서 8일에는 상봉 행사에 참가한 북쪽 이산가족인 또다른 김모 씨가



딸과 함께 '우리민족끼리 TV'에 출연해 북한 당국이 선물을 빼앗았다는 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부인함.

■ 기타 (대남)

- '민족문제를 외부에 들고나가 청탁하는 방법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고 동족 간에 불신과 대결만을 증대시킬 뿐'이라며 '온 겨레가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서 제시된 대로 단합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해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고 선동(3.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민족대단결 5대 방침 : △민족자주의 원칙 견지 △애국애족의 가치 밑에 단결 △남북관계 개선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 △온민족이 서로 적극 대화하고 연대·연합 강화
- '민족문제·통일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해 우리민족끼리 입장 견지' 지속 강조와 '온 겨레의 외세배격,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조국통일 투쟁' 선동(3.7,평양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및 6자회담

●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방북(3/7,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가 7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음.
- 북한은 자세한 방북 목적은 밝히지 않았으나, 로그비노프의 방북은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 간 회동 이후 10여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방북 기간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됨.
-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6자회담 재개 등을 논의했으며, 이에 앞서 데이비스 대표는 지난 1월 한·중·일 3국을 방문해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난바 있음.

● 中외교부장 "비핵화만이 한반도 진정평화 이뤘"(3/8, 연합뉴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전망 등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만이 한반도의 진정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음.
-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에게 레드라인이 있다"면서 "그것은 절대로 동란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및 이 지역 각국의 공통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음.
- 또한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을 '언덕을 오르고 구덩이를 지나 정도를 걸어가는 것'에 비유해 먼저 "비핵화라는 언덕"을 올라야 하고, "상호신뢰 부족이라는 구덩이"인 북미간 불신을 극복해야하며, "평등한 대화, 협상과 담판만이 정도"임을 언급하며 6자 회담은 현재 관련 당사국이 수용한 유일한 대화기제라고 강조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北미사일 추가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3/4, 연합뉴스)

- 미국은 3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사거리 500km 이상의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음.
- 쟈 스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거듭 강조



했음.

- 지난달 27일 북한이 사거리 300km 이상의 스커드-B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직후 미국이 강경대응을 자제하던 기조와 다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됨.
- 그러나 사키 대변인은 이날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미 국방부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3/5,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5일 공개된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서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한국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며,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감시 성능을 가진 레이더 기지를 일본에 한 곳 더 건설하고 있음.
- 또한 미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튼튼한 입지"를 지속하겠다는 구상임.

● **美 국방부 "북한, 장성택 처형으로 큰 변화 없을 듯"(3/6,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 동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한 '2012 국방수권법'에 따라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 연례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음.
- 보고서는 별도의 '현안 분석'을 통해 그의 처형이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장성택이 중국 등과 교류하면서 외화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의 처형으로 인해 경제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 이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내·외부에 모두 위협 요인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전한 뒤 "동맹으로 여겨지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민들도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의 핵심 안보도전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북한은 군사적 역량에 있어 자원부족과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고, 강력한 한·미 동맹 유지로 인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군사도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 국방부, 북한 위협 대응 미사일 방어계획 강화(3/8, 미국의소리)**

-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MDA)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대해 자세히 밝혔음.
- 시링 국장은 회견에서 2015 회계연도 예산으로 74억5천만 달러, 2019년까지 총 370억 달러의 미사일 방어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것이며,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지난 해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발



-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회담이 실현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음.
- 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노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은 이번 접촉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협의할 외무 국장급 교섭 재개를 제의했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측은 이에 대해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회답했음.

마. 기타

- "유엔대북제재위, 이달 하순 北 미사일 발사 논의"(3/8,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오는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외교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음.
 -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지난 5~6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음.
 - 북한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사거리 2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4발을 발사한데 이어 이달 3일 동해상으로 사거리 500km 짜리 발사체 2발을 쏘으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 '자위적 로켓 발사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키리졸브 연습 오늘 종료...독수리 연습 내달 18일까지(3/6, 연합뉴스)
 -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휘소훈련인 한미 연합 '키 리졸브'연습은 6일 종료됐고, 키 리졸브와 함께 시작된 실기동훈련인 한미 연합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18일까지 지속됨.
 - 지난달 24일 시작된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5천2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키 리졸브 연습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작년 말 한미가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노린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연습기간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과 300mm 신형 방사포 등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음.
 - 독수리 연습 때는 양국 해상 전력이 참가한 해상종합기동훈련과 해병대



상륙기동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임.

나. 한중 관계

- **주한 中대사 "차대통령 취임후 한중 가장 가까워져"(3/6, 연합뉴스)**
 - 추귀홍 신임 주한중국대사는 6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예방차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 특히 정치 관계가 전례 없이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 추 대사는 "지난해 중일, 중한 무역액은 각각 3천억 달러, 2천740억 달러로서 한국 인구가 일본의 절반 정도임을 따져보면 한국은 중국에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면서 "또 중국에 찾아온 외국 관광객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최근 쿤밍 철도역 테러 사건으로 희생자가 생겨 위로를 보낸다"면서 "이런 테러가, 특히 동북아에서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 또한 황 대표는 "북한과 통일도 해야 하는데 중국과 모든 점에서 같이 의논하고,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위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제안했다.

다. 한일 관계

- **러셀 "한·일 역사문제, 동북아 안보에 짐 안돼야"(3/5,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북아에서의 미국 동맹 강화 방안' 청문회에서 "미국의 두 동맹(한·일) 간의 관계가 긴장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 그는 갈등의 원인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역사 분쟁은 어느 한 쪽에 의해서만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양측에 모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러셀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략적 협력은 북한의 위협과 여러 지역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의 미래 안보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한편, 러셀 차관보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음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비핵화 원칙에 따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김美대사 "軍위안부, 중대 인권침해...日 해결해야"(3/6, 연합뉴스)**
 - 성김 주한 미국 대사는 6일 관훈클럽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혹은 성노예라는 문제는 아주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아직 그 고통에서 살아가는,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저희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줄



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그는 구체적 해결 방식에 대해 "결국 한일 문제"라면서도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우려나 고통을 다스리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미국은 우방국으로서 권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이밖에도 성김 대사는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북핵문제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며,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 정부 "日, 반론할 게 아니라 軍위안부 해결해야"(3/6, 연합뉴스)

- 정부는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한 표현으로 촉구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연설에 대해 일본이 반론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반론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일본이 반론을 할 경우 우리가 다시 재반론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구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이며, "일본 정부는 반론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해결의 길로 나서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 한편 조 대변인은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 동포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부 또한 동해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 일, 한국 TPP 관심표명에 '환영'...첫 예비협약(3/6, 연합뉴스)

- 한국은 6일 도쿄에서 한국의 일본 측과 첫 TPP 예비 양자협의를 했으며, 일본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 표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산업부는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약 결과, 3월 말 완료 예정인 TPP의 산업·분야별 심층영향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이후에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한편, 한국은 이날 일본을 마지막으로 12개 TPP 참여국과 1차 예비 양자협의를 끝냈으며 이달 중순부터 2차 예비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다.

라. 미·중 관계

● G2 亞패권싸움... '해군력 60% 배치' vs '국방비 12% ↑'(3/6,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5일 '4개년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이 지역에서의 공군력도 증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국방 정책의 핵심이 이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



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도 이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2차 회의에서 올해 중앙 정부 차원의 국방 예산을 8천82억2천만위안으로 전년보다 12.2% 늘리기로 했으며, 중국 국방 예산은 지난 몇 년간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당의 강군 목표를 견지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보화 시대 군대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태평양군 사령관 "중국 군사력 증강 우려"(3/6, 연합뉴스)**

- 새뮤얼 리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5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 위원회에서 중국이 강군 육성 의지 천명과 함께 올해 국방비를 두자릿수 인상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
- 리클리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관계가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중국이 지역 안보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그는 중국의 최근 활동을 보면 중국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역내 우방에 대한 미국의 방위 능력 분쇄를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도입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 이어 미국이 원하는 규모의 해군력을 아시아권에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우위를 장기간 위협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음.
- 이와 관련 쟈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에 보다 명확한 국방 예산 내역을 촉구했으며, 군사력 사용이 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음.

마. 마일 관계

● **일본, '아베 비판' 사설 게재 뉴욕타임스에 항의(3/5,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뉴욕타임스가 2일자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난징학살을 부정했다고 보도한 것은 "현저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뉴욕타임스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음.
-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의 위험한 역사수정주의' 제하의 이 사설에서 "아베 씨와 국가주의자들은 여전히 1937년 일본군에 의한 난징 대학살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총리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본군이 난징에 입성한 후 비전투원 살해, 약탈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아베 정권도 같은 견해"라고 말했음.



- **아베 "北 유사시 납치피해자 구출에 美 협력 중요"(3/5,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에 내란 등이 일어나면 납치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그는 집단자위권의 하나로 거론되는 선박 강제조사에 언급,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그 함선을 세워달라'는 의뢰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단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가 될 자위대법 개정 등에 관해서는 "실제로 자위대가 출동할 경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이 남북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발언이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일 美대사 "일본에 의견 차이 계속 말할 것"(3/6, 연합뉴스)**
 -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이 일본을 비판한 것에 관해 "친구나 동맹국에도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이라고 6일 말했다.
 - 그는 이날 방영된 NHK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NHK 주요 인사의 망언 등에 관해 "미국 대사관의 언급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 케네디 대사는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일본 정치인이 과거사와 관련해 한국 등 이웃 국가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면 계속 비판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한일 관계의 회복을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 **〈우크라이나 사태〉 미일정상 전화회담... "긴밀공조 확인"(3/7,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과, 선진 7개국(G7) 정상 성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경제·정치 개혁을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일본도 우크라이나 정세의 조기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은 전했다.
 -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러시아 제재 조치를 발동한 데 대해 "각국의 움직임을 감안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바. 마러 관계

- <우크라이나 사태> "美·EU-러시아 '제2차 냉전' 직면"(3/4, 연합뉴스)
 - 르피가지로는 3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소장이 "크림 위기로 러시아가 미국,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동유럽에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제2차 냉전'으로 표현했다고 보도했음.
 - 미국과 함께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자 G8 정상회의 예비회담 참여를 유보하기로 했고, EU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전날 열린 회원국 대사회의를 통해 러시아에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크림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촉구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했음.
 -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방의 군사 개입이 더 어려운 상황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신문은 평가했음.
- <우크라이나 사태> 미·러 외무장관 첫 만남...우크라 논의(3/6, 연합뉴스)
 - AFP통신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레바논 국제지원그룹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직접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음.
 - 양국 장관 면담 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서방국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 간 만남에서 합의된 것은 없었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참여 없이는 결코 합의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서방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 이날 파리에 와 있는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외무장관과 만나 사태를 논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 측의 거절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음.
- 우크라이나 군사긴장 고조...美·EU 제재에 러시아 '반격'(3/8, 연합뉴스)
 -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7일 러시아 귀속과 주민투표를 결의하고 미국과 러시아 모두 주변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상황이 다시 험악하게 돌아서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를 압박하는 제재안을 내놓으며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을 경고하고 보복을 천명하는 등 강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큰 문제는 현재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지친데다 국방비까지 대



폭 줄여놓은 상황에서 군사개입을 시도할 '의지'와 '힘'이 없으며, 유럽 연합(EU)과 다각도의 제재도 실제로는 유럽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경제적 협력관계가 크기 때문에 제재에 적극 동참하기 어려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사. 중일 관계

- "아베, 5월 영·독·佛 등 유럽주요국 순방" <日신문>(3/3,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월 초 황금연휴(3~6일)를 맞아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신문은 요국들을 방문할 전망이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음.
 - 신문은 아베 총리가 유럽 주요국 방문을 추진하는 데는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여론전을 펴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소개했음.
 - 작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일본은 중국의 거센 국제 여론전에 직면했고, 아베 총리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현재의 중일 관계를 1차대전 직전의 영국과 독일관계에 비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서방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유럽 주요국에서 '중국 위협론'에 대한 인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고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됨.
- 일본언론 "中, 군비확충 중단하고 투명성 높여야"(3/6, 연합뉴스)
 - 중국이 5일 올해 중앙정부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12.2% 증액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보수냐 진보냐 성향에 관계없이 일제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음.
 -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중국의 올해 방위예산은 엔화로 13조4천억 엔(약 140조원)에 이르며, 일본 방위예산의 3배에 가깝다"고 소개한 뒤 "이 완강한 군비확충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세계가 강한 우려를 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을 통해 "작년에 포함된 지방분 국방예산이 올해는 제외됐기 때문에 중국의 국방비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실제 국방예산은 공표된 액수의 2배 정도에 달한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 니혼게이지아신문도 "투명성을 높이고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한다"며 "일본 등 주변국은 중국군의 동향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 중러 관계

- <우크라이나> 중-러, 反서방 공동전선 형성하나(3/6, 연합뉴스)
 - 영국 BBC 방송 중문판은 5일(현지 시간) 동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



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의 적'에 맞서 '유사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 BBC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침묵하던 중국은 5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로 사태 해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정세가 현재까지 전개돼 오는 과정에서 우연 가운데 필연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가 하루아침에 서방식 민주 정치제도를 모방하려 한 것이 위기를 초래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음.
- BBC는 최근 '신 밀월기'에 들어선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논평했음.
- 한편, 중국 외교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제재방안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걸핏하면 제재를 가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제재로써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자. 일러 관계

● 일본, 對러 영토협상에 '우크라 불똥' 털까 우려(3/3,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정권은 역점을 두는 러시아와의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 미칠 영향 때문에 대응수위 조절에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일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음.
- 넛케이이는 서방 국가들과 비슷한 톤의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아베 정권은 러시아를 너무 몰아붙이면 푸틴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지도력이 저하되면 쿠릴 4개섬 협상의 진전을 위한 푸틴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제했다고 평가했음.

차. 기타

● 일본 "고노담화 검증 후 국제사회에 설명"(3/7, 연합뉴스)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은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음.
-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같은 자민당 정권 때 나온 고노담화를 수정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고노담화를 무력화하는 효과



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음.

-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고노담화 검증문제가 논란을 야기하자 잇달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며 담화 자체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세코 부장관은 또 고노담화 검증팀 구성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검증결과의 공표 및 보고 방법도 논의를 해 나가고 싶다"고 부연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공화국 자주권 침해 호주 선교사 추방 결정"(데일리NK, 3.3)**
 - 북한이 2주가량 억류 중이던 호주 선교사 존 쇼트(75) 씨를 추방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2월 18일 관광객으로 입국했던 쇼트를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우리 공화국법의 관대성과 연명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그를 공화국 경내에서 추방하기로 했다"고 설명
 - 이어 "쇼트는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에 평양의 불교 절간을 참관하는 기회를 이용해 종교선전물을 몰래 뿌렸다"면서 "쇼트는 이번 행위가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 신뢰심을 심히 모독한 범죄이며 종교를 몰래 유포한 것이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관대하게 용서해주시기를 간청했다"고 언급
- **1년 7개월 만에 마주 앉은 북일 적십자(연합뉴스, 3.3)**
 - 3일 오전 북한과 일본 사이에 1년 7개월 만에 적십자 회담 개최
 -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는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과 일본 외무성의 오노 게이치(小野啓一) 동북아과장이 동석
 - 이에 따라 적십자 간 협의 의제인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의 북한 내 묘소 참배 허용 문제 이외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일 국교정상화 등을 의제로 하는 정부 간 공식 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
- **일본 외무상 "북일 정부간 접촉 의미 있었다"(연합뉴스, 3.4)**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선양(瀋陽)에서 3일 열린 북일 정부 간 비공식 접촉에 대해 "일정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 그는 다만 "당장 정부 간 교섭을 재개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북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해 북한 측의 대응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표명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오전 정례 회견에서 이번 북일 접촉에서 "진지,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교환과 함께 일본 측의 문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를 계기로 납북자 문제의 진전을 약속
- **"北주민, '선거前 명절 분위기' 선전에 콧방귀 뿜 것"(데일리NK, 3.4)**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만들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선거풍경'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9)를 선전하며 "자본주의 선거는 치열한 경쟁마당"이지만 북한식 선거 풍경은 명절분위기라고 강변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거가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경쟁마당, 대결장으로 된다"면서 "그러나 사회주의 이 땅에서는 선거가 남녀노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경사로운 명절로 되고 있다"고 선전
 -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대표들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을 몸소 만나주시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고무격려 해주시었으며 찬성투표를 했다"고 언급
 - 그러나 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에서 선거를 진행할 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대 투표함을 지키는 사람을 따로 두고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한다"고 지적
- WFP '2월 북한 당국 배급량, 지난 1년 사이 최고'(미국의 소리, 3.4)
 - 세계식량계획(WFP) 디르크 슈테겐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2월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주민 한 명당 하루 420g으로, 지난 1년 사이 최고를 기록
 - 지난 해 1월부터 5월까지 배급량은 주민 한 명 당 하루 400g이었으며, 이후 6월과 7월 390g으로 다소 감소, 8월 상순에는 350g, 하순에는 320g, 9월에는 310g까지 감소
 - 하지만 10월에 390g으로 늘고 11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400g을 유지
 - 지난 달 배급량은 420g으로 늘었지만, 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치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WFP는 2월 한 달 동안 북한 내 9개 도 87개 군의 1백 55만여 명 주민들에게 2천 213t의 식량을 지원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39개 군에서 168차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 北통신, 유엔보고서 또 비난..."미국이 인권침해국"(연합뉴스, 3.4)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달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거듭 비난하며 미국이야말로 인권침해 국가라고 주장
 - 중앙통신은 이날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100% 날조된 것인데다가 그것을 꾸며낸 나라들부터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인권의 최후진국들"이라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고 비난
 - 중앙통신은 미국의 극소수 부자들이 권력과 재력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른바 '번쩍거리'는 미국 사회가 실지에 있어서는 민중의 삶을 난도질



하는 암흑사회, 썩어빠진 세상에 불과하다"고 지적

● **김정옥 밀입국 관련자들 문책당해(자유아시아방송, 3.4)**

- 북한에 억류 중인 남한 김정옥 선교사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김씨의 밀입국 동선에 있었던 신의주와 평양 사이의 검문소들이 엄중한 문책에 놓임.
- 신의주의 한 주민 소식통은 "김정옥 회견 이후 평양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들은 모두 남조선 김정옥과 연계가 있던 사람과 그 가족들로 추정되며 산간오지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이 밖에도 "신의주와 평양 사이에 있는 수많은 검문 초소 책임자들이 연행돼 갔다"면서 "김정옥이 단둥에서 평양까지 밀입국할 때 통과한 초소 책임자들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 내부 여행지들에 대한 검문검색도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무역을 하고 있는 평양 거주 화교소식통은 기자회견 다음날 국제열차 편으로 단둥에 나올 때 "도중에 열차 안에서 신분증과 통행증 검열이 평소의 2배가 넘었다"고 언급
- 그는 "장거리를 오가는 달리기 장사꾼들 중에는 일일이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적당히 뇌물을 고이면서 오가는 사람이 절대다수인데, 요즘 같은 때 '시범잰(분보기)'으로 잘못 걸렸다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설명

● **북, 선거 앞두고 각종사건 빈발(자유아시아방송, 3.4)**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둔 북한 함경북도 일대에서 의도적인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으나 아직까지 범인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사법당국이 긴장
- 함경북도 일대에서 회령시 신흥리의 '적위대 훈련소'와 새별군 룡계리의 축산반 등 곳곳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으며, 청진시 신암구역 당위원회 경리과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중국산 '동풍호' 자동차 두대가 완전히 불탔음.
- 함경북도 당국은 이러한 사건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파탄시키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규정하고 경비인원을 배로 늘렸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한 목소리를 냈음.
- 또한 연락이 닿은 회령시 한 주민은 3월 1일 저녁 함경북도 회령시 오봉리 '투표소' 입구에 붙어있던 유권자 명단이 모두 훼손되어 시보위부 간부들과 시당책임비서, 시인민위원장이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강조
-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다면서 해당 투표소를 담당한 보위원과 보안원이 시당 조직부에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이들 사건의 범인들에 대



수족병이 황해도 지방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도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한 모습을 열차 칸에서 목격했다"면서 "초소에서는 검역증이 없는 차량을 일절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

- **北 "美, 세계 최대 인권유린국" 연일 집중 공세(연합뉴스, 3.6)**
 - 북한은 지난달 27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는 하루가 멀다고 '세계 최대의 인권 유린국'이라고 미국의 인권 상황을 직접 겨냥해 비난
 - 조선중앙방송은 6일에도 '이란 외무성, 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 규탄 배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란 외무성이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자체가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를 감행"했으며, "미국은 인권 문제를 두고 다른 나라들에 설교할 자격도 없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함.
 - 5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범람하는 미국의 해외관 인권유린 범죄'라는 글을 통해 미국 정부의 '반테러전', 수감자 가혹행위로 비난받은 관타나모 수용소, 정보기관의 외국 지도자 불법 도·감청 등을 예로 들며 비난
 - 특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벌인 '반테러전'은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대량 살육전"으로, "최악의 국가테러 범죄, 최대의 인권유린 행위"라고 맹비난
 - 통신은 4일에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COI) 지난달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세계 최대 인권 유린국'이라고 지목했고, 3일에는 중국 국무원이 '2013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해 미국의 인권문제를 폭로했다고 보도
 -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대남 비방을 자제하고 대신 미국을 비난하는 데 집중

- **北 인권 다룬 '신이 보낸 사람', 세계 곳곳서 상영(연합뉴스, 3.6)**
 - 지난달 개봉한 국내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 곳곳에 알리는 데 활용되고 있음.
 -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영화가 오는 8월 홍콩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며, 이달 18일에는 영국 의회에서,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상영 예정이라고 설명
 - 또 오는 4~5월에는 미국 보스턴 지역 대학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상영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 북한정의연대 대표인 정베드로 목사는 "'신이 보낸 사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 언어로 자막을 만들어 널리 소개할 계획"이라고 언급

- **북, 지역마다 '방랑자 합숙' 운영(자유아시아방송, 3.6)**
 - 북한이 '꽃제비'로 불리는 노숙자들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각 지역마다 '방랑자 합숙'을 개설
 -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주민은 "지난해 가을부터 회령시 동명동에 '방랑



- 자 합숙이 새로 생겨났는데 그곳에 30명 정도의 '꽃제비'들이 살고 있다"며 동명동에 있는 국경경비대 연대 지휘부 근처의 땅집(단층집)으로 남, 여, 미성년자를 구분해 방은 모두 4칸이라고 설명
-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소식통도 "혜산시 '방랑자 합숙'은 혜산동에 있는 '노동단련대' 건물 안에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곳에 '방랑자 합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언급
 - '방랑자 합숙'은 올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각 도 소재지들에 '육아원'과 '요양원'이 건설되게 될때까지 모든 시, 군에서 임시적으로 운영
 - 그러나 일부 소식통들은 '방랑자 합숙'이 운영되도 '꽃제비'들을 완전히 없애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방랑자 합숙'에서 생활하는 '꽃제비'들은 일반 노동자들과 꼭 같은 하루 450그램의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며 "그 정도의 식량만으로는 절대로 배고픔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
 - 복수의 다른 소식통들도 '방랑자 합숙'에 있는 '꽃제비'들은 새벽 6시에 기상을 해야 하고 취침시간인 저녁 9시까지 농사일과 학습, 생활총회와 같은 각종 어려운 노동생활과 규율생활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
 - "감옥이나 다름없는 '방랑자 합숙'을 벗어나기 위해 '꽃제비'들의 필사적인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인 문제인 '꽃제비'들을 없애려면 '방랑자 합숙'의 환경과 운영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그들은 지적
- 로버트 킹 미 특사 "북한에 케네스 배 석방 압박 중"(미국의 소리, 3.7)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언급
 - 킹 특사는 6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방북이 무산된 지난 달 이후 배 씨 석방과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하지만 여전히 희망적이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언급
 - 한편 킹 특사는 지난 달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아직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힘.
- 日 매체 "北 대의원선거 투표소 훼손 반발"(뉴스1, 3.7)
-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오는 9일 치뤄질 북한의 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 전역의 투표소가 '24시간 경비태세'에 돌입했다고 7일 보도
 - 아시아프레스는 양강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북도 정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소 간판이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구역의 보위부장과 담당 보위부원이 문책을 당했다"고 전함.
 - 이 사건 발생 이후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이 투표소를 교대로 24시간 경



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투표소 외 선거 슬로건이 적힌 간판과 포스터 등에 대한 경비도 24시간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 또 올들어 탈북자 및 불법 무역 단속 등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 경비에 배치됐던 보위부 요원들도 지난 2월27일을 기해 모두 철수했다며 이들이 선거 경비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FAO, 북한 식량부족국가 재지정(자유아시아방송, 3.7)**

- 식량농업기구(FAO)는 7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4년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 중 하나로 재지정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2013년 곡물 수확량이 3년째 5% 이상 증가했지만,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북한 가정 84%가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
- 또한 북한의 식량체계가 여전히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작물 재배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2살 미만 어린이의 발육부진율이 여전히 높고 미량영양소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힘.

● **FAO, 내주 북 구제역 실사팀 파견(자유아시아방송, 3.7)**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 당국의 구제역 지원 요청에 대응해 피해 지역에 실사팀을 다음 주 파견 예정
- 식량농업기구는 7일 북한 당국이 구제역 방역 및 퇴치지원에 대한 요청을 한 데 대해 북한에 보낼 실사팀(assessment team)의 구성을 마쳤으며 "실사팀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자 수속 절차를 밟았으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함.
- 이번에 북한에 파견될 실사팀은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실무진과 외부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실사팀의 인원과 구성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음.
- 또 실사팀이 방북에서 돌아온 후에야 북한에 어떤 구제역 지원을 할지와 그 시기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틀 앞두고 투표 독려(데일리NK, 3.7)**

- 북한 당국이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전매체를 통해 투표 참가를 독려
- 노동신문은 7일 정론을 통해 "국민들이여, 뜻 깊은 선거장으로 달려가자"면서 "이 마음, 이 맹세를 안고 한없이 소중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우리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펼치자"며 투표 참가를 독려
- 그러면서 "국민으로서의 긍지는 정권의 주인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떳떳이 행사할 때 비로소 간직되는 것이다. 선거는 정권의 주인을 비쳐주는 맑은 거울"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고 받들 충정의 한마음을 자기들의 한 표, 한 표에 뜨겁게 담자"고 강조



-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북한 당국이 오는 9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를 공시했다고 전했다.
- 중앙통신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분구 선거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공시했다"면서 "또한 전국 모든 선거구에 선거장(투표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한편 통신은 전날 중앙선거위원회가 김정은이 지난달 18일 북한 전역의 모든 선거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다른 모든 선거구에서도 "대의원 후보자 추천, 등록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한 바 있음.

● 北중앙통신 '고발장'... "美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연합뉴스, 3.8)

-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반발해 미국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을 단죄한다'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발표, "미국이 또다시 주제넘은 (북한)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며 "미국은 인권이란 말 자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
- 고발장은 "인간의 모든 권리가 여지없이 유린 말살되는 인간 생지옥이 다름 아닌 미국 사회"라며 미국 내 빈부격차, 총기사건, 민족·성별에 따른 불평등 등을 다룬 언론보도와 각종 자료를 열거
- 이어 "제반 사실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말살국인 미국이야말로 인권피고석에 서야 할 범죄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조선중앙통신사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여론화, 국제화하여 주권국가들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추악한 인권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이를 단호히 배격·분쇄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밝힘.

2. 북한인권

● 반 총장, "北 인권 개선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연합뉴스, 3.3)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위원회 고위급 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높이 평가하며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범죄 국제법정 회부' 요구 잇따라(미국의 소리, 3.4)

-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 법정에서 회부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주



의회에 제출

- 이번 결의안은 세습정치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탄압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알리고 미국 정부가 탈북자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부 장관, 일리노이 연방하원과 일리노이인권위원회에도 전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 결의안은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굶주림과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북자들을 위해 연대할 것을 밝힌다"고 규정

● 류길재 "北 약속 안 지키면 속된말로 국물도 없다"(연합뉴스, 3.5)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현정회 초청 강연회에서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내겠다"며 "국제사회가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
- 류 장관은 "북한 동포는 형제나 마찬가지로인데 어려운 인권상황을 우리 사회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못 기울이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
- 이와 함께 "남북관계가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부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생각"이라며 "남북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면 정부 예산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들어갈 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힘.
- 또한 축산·산림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방식으로는 북한 농촌 사회가 영농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

● 미국 정부, 유엔서 북한인권 권고안 관심 촉구(미국의 소리, 3.5)

- 미국 국무부의 새라 시월 시민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인 4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거듭 높이 평가하면서 국제사회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
- 시월 차관은 조사위원회가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임무를 완수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직접 접근하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창의적으로 수행했다고 활동을 높이 평가
- 또한 수많은 용감한 탈북자들이 비밀의 장막을 걷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
- 위원회 보고서와 권고안이 매우 강력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
- 한편 덴마크의 마틴 리테가르드 외무장관은 위원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인도적 잔악 행위와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에 매우 경



악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윤병세-유엔인권대표, '위안부 문제, 국제관심 필요' 공감(연합뉴스, 3.6)**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기회에 만남을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인권 등 주요 인권 문제 및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양측은 유엔 인권조사위(COI)의 북한인권 보고서에 대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후속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
- 외교부는 윤 장관이 탈북민 문제에 대한 필레이 인권최고대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

●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북한 인권 개탄...국제재판소 회부해야"(미국의 소리, 3.6)**

-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6일 한국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끔찍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성 김 대사는 미국은 관련국들과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도 논의할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힘.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기 때문에 별로 놀랄만한 표현이 아니라며 그렇다고 북한과의 핵 협상까지 관심이 없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 **한국 정부, 유엔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미국의 소리, 3.6)**

-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
- 윤병세 외교장관은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이어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으며,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 인권규범을 강화하는 것에 적극 지지표명
- 특히 지금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많은 탈북민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들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
- 이밖에 윤 장관은 한반도 분단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



도 그 절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원회 보고서가 한반도의 심각한 인도적 비극 즉, 이산가족, 납치 피해자, 국군포로 문제도 다루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COI 접근 거부에 유감"(미국의 소리, 3.8)
 -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 방문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
 -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에서 지난 해 활동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표
 - 필레이 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에 관한 충고, 녹취와 분석 수단, 자체적으로 보관 중인 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
 - 북한이 위원회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을 표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언급
 - 위원회가 북한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혁신적인 방법의 자료수집을 통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밝혀냈다고 평가
 - 필레이 대표는 모든 나라들이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와 함께 그 같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
 -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거듭 전면 거부하면서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만든 것으로, 궁극적으로 북한의 사회제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

3. 탈북자

- "탈북자, 인터넷 접근 어렵지만 적극 이용"(연합뉴스, 3.3)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작년 10~12월 메트릭스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일반 국민 5천500명, 장애인·저소득·장노년·농어민 등 4대 정보 소외계층 각 2천700명,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각 600명 등 총 1만7천5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방식으로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현황을 조사
 -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PC 접근이나 이용 능력은 농어민·저소득층 등 소외계층보다 떨어져, 저연령층 비율이 높은 탈북자가 정보활용 능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정보기술(IT)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유선 인터넷(PC) 접근가능 정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접근 수준은 전체 국민의 89.4%로 4대 소외계층(93.6%)보다 낮았으며,



PC 이용능력을 뜻하는 정보역량도 57.6%로 소외계층(60.0%)에 못 미친다.

- 그러나, 실제 활용정도를 의미하는 활용 수준은 72.2%로 소외계층(62.3%)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음.
- 저소득층과 저연령층 비율이 높은 탈북주민 특성상 PC 보유율이 낮아 이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PC를 이용할 수 있는 탈북자는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
- 탈북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PC 공급과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됨.

● 테러 발생 中 中문밍서 탈북자 3명 체포(동아일보, 3.4)

- 사단법인 물망초는 3일 중국 윈난(雲南) 성 쿤밍(昆明)에서 탈북자 3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밝힘.
- "테러 직후 검색이 강화되면서 탈북자 3명이 이날 오후 2시 중국 신분증이 없다는 혐의로 검거됐고 현재 푸얼(普이) 시 쓰마오(思茅) 구 구류소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3명은 강 모(19·여), 윤 모(28), 윤 모 씨(26·여)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BBC, '재입북 원하는 탈북자' 조명(KBS, 3.6)

- 영국 BBC 뉴스는 한국에서 살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하며 탈북자의 한국 사회 적응 어려움을 지적
- BBC는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자가 2만 5천여 명이고 공식적으로 재입북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이 13명이라며, "2만여 명을 통합하기 어렵다면 통일 후 북한 주민 2천만 명을 흡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질문
- 또 탈북자의 실업률이 한국 평균 실업률의 3배 이상이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겪었으며 젊은 탈북자의 25~30%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보도

● 탈북 어린이 대안학교 교장 횡령 수사(YTN, 3.5)

- 검찰이 탈북 어린이 대안학교 전 교장인 43살 채 모 씨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 검찰은 학교를 설립한 탈북자 단체 대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 채 씨는 교비 3억 원가량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학교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채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짐.

● 부산에 영남 첫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뉴스1, 3.7)



- 재단법인 북한인권과 민주화실천운동연합(이하 북민실)은 탈북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인 장대현학교를 13일 개교한다고 밝힘.
- 이 학교는 영남지역 최초로 생기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로, 이곳에서는 학생 2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전임교사 4명과 자원봉사 교사 20여 명의 지도아래 공부하게 될 예정

● 중국 정부, '탈북자 난민 인정' 유엔 권고 거부(미국의 소리, 3.7)

-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히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호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에 이같이 밝힘.
- 보고서에서 난민 송환 금지 원칙과 난민 관리에 관한 국제적 관행들을 준수하고 있으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난민들에 대한 대우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
-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적 정신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고 설명
- 또한 중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권고도 거부하면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한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

4. 이산가족

● 차대통령 "서신교환·화상상봉 실현 北과 협의하라"(연합뉴스, 3.4)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과 화상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측과 협의할 것을 당국에 지시
- 또 "남북한에 있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한 가족들이 한번이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생사확인, 서신교환, 화상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언급

● 정부, 北에 '12일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연합뉴스, 3.5)

- 정부는 5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



식 제의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오늘 중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논의할 틀로 '고위급 접촉' 대신 '적십자 실무접촉'을 택한 것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기 때문에 적십자 채널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격이나 급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

● 北 "환경, 분위기 조성 안됐다"...적십자 실무접촉 거부(연합뉴스, 3.6)

- 북한이 6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
-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내온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함.
- 북한은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
- 북한의 이런 입장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측과는 대화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북측이 남북 적십자 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지는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우리 측이 수차례 밝혀왔듯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떤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측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북한은 5일 오후에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위를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거나 물리적으로 못하게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응답

● 여야, 北 적십자 실무접촉 거부에 유감 표명(연합뉴스, 3.6)

- 여야는 6일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하루가 아까울 정도로 절실하고 시급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인륜, 천륜의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북한



- 이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
-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남측이 제안한 적십자사 실무접촉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이제라도 북한은 전향적 입장에서 적십자사 실무접촉에 응해 이산가족들에게 따뜻한 봄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발표
- **정부, 北에 "적십자 실무접촉 호응촉구" 통지문 발송(연합뉴스, 3.7)**
- 정부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거부하지 말고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7일 발송
 - 정부는 이날 대한적십자 총재 명의의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측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북측이 우리 측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 또한 "지난 2·5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이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북측이 우리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 **6.25전쟁 참전 미 의원들 "재미 한인 가족 상봉 결의안 제출"(미국의 소리, 3.8)**
-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하원의원 4명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
 - 민주당의 찰스 랭글, 존 코니어스 의원과 공화당의 샘 존슨, 하워드 코블 의원 등 '6.25 참전용사 4인방'으로 불리는 노병 의원들이 공동 발의
 - 찰스 랭글 의원 사무실은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데 뒤이은 조치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북한에 거주하는 친지들 간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
 - 랭글 의원 측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미 한인들에게도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
 - 이들은 지난달 초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도 북한의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음.
- **北 이산가족 상봉자 "南 선물갈취 주장은 날조"(연합뉴스, 3.9)**
- 북한이 대남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한 일부 언론의 이산가족 상봉 보도 반박
 - '우리민족끼리TV'는 8일 저녁 홈페이지에 지난달 20~2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한 북측 김 모 할머니와 딸 리 모 씨의 인터뷰를 담은 4분40초가량의 영상을 게재
 - 영상에서 김 할머니는 "북측 이산가족들이 남측 가족에게 받은 기념품



- 을 당국에 의해 빼앗겼다는 남측 언론의 보도가 있다"는 기자의 말에 "그건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부인
- 리 씨 역시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100% 우리가 다 갖고 있다"며 "북에 가면 돈과 물건을 다 빼긴다는 데 그런 일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남측 가족이 건넨 선물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보고...이거 다 가져가라' 하는 가족도 있었다"며 남측 선물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태도를 보임.
 - 이들은 상봉 행사에 참가하면서 북한 당국에 돈을 전혀 내지 않았다면 서 리 씨는 옷과 호텔 식사까지 모두 '공짜'였다고 하며 "식비 정산도 하나도 없어 정말 놀랐단 말입니다. 이번에 (북한 당국의) 배려가 참 컸다"고 언급
 - 대남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악의에 찬 모략보도, 세상에 다시없을 날조의 극치'라는 글에서 남한의 한 언론을 지목하며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관련해 우리를 엄중히 모독 중상하는 기사를 냈다"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북측 이산가족 상봉자들이 행사가 끝난 직후 '사상교육'을 받지 않고 모두 귀환했다고 하며 "그 무슨 '기념품과 달러 갈취'도 있을 수 없는 날조 중의 날조"라고 주장

5. 남북자

- **차대통령 "서신교환·화상상봉 실현 北과 협의하라"**(연합뉴스, 3.4)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과 화상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측과 협의할 것을 당국에 지시
 - 또 "남북한에 있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한 가족들이 한번이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생사확인, 서신교환, 화상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언급
- **정부, 北에 '12일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연합뉴스, 3.5)
 - 정부는 5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오늘 중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박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논의할 틀로 '고위급 접촉' 대신 '적십자 실무접촉'을 택한 것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기 때문에 적십자 채널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격이나 급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

- **北 "환경, 분위기 조성 안됐다"...적십자 실무접촉 거부(연합뉴스, 3.6)**
 - 북한이 6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
 -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내온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함.
 - 북한은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
 - 북한의 이런 입장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측과는 대화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북측이 남북 적십자 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지는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정부는 "우리 측이 수차례 밝혀왔듯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떤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측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임.
 - 한편 북한은 5일 오후에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위를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거나 물리적으로 못하게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응답
- **여야, 北 적십자 실무접촉 거부에 유감 표명(연합뉴스, 3.6)**
 - 여야는 6일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하루가 아까울 정도로 절실하고 시급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인륜, 천륜의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북한이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
 -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남측이 제안한 적십자사 실무접촉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이제라도 북한은 전향적 입장에서 적십자사 실무접촉에 응해 이산가족들에게 따뜻한 봄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발표
- **정부, 北에 "적십자 실무접촉 호응촉구" 통지문 발송(연합뉴스, 3.7)**



- 정부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거부하지 말고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7일 발송
 - 정부는 이날 대한적십자 총재 명의의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측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북측이 우리 측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 또한 "지난 2·5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이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북측이 우리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 6.25전쟁 참전 미 의원들 "재미 한인 가족 상봉 결의안 제출"(미국의 소리, 3.8)
-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하원의원 4명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
 - 민주당의 찰스 랭글, 존 코니어스 의원과 공화당의 샘 존슨, 하워드 코블 의원 등 '6.25 참전용사 4인방'으로 불리는 노병 의원들이 공동 발의
 - 찰스 랭글 의원 사무실은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데 뒤이은 조치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북한에 거주하는 친지들 간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
 - 랭글 의원 측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미 한인들에게도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
 - 이들은 지난달 초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도 북한의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음.
- 北 이산가족 상봉자 "南 선물갈취 주장은 날조"(연합뉴스, 3.9)
- 북한이 대남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한 일부 언론의 이산가족 상봉 보도 반박
 - '우리민족끼리TV'는 8일 저녁 홈페이지에 지난달 20~2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한 북측 김 모 할머니와 딸 리 모 씨의 인터뷰를 담은 4분40초가량의 영상을 게재
 - 영상에서 김 할머니는 "북측 이산가족들이 남측 가족에게 받은 기념품을 당국에 의해 빼앗겼다는 남측 언론의 보도가 있다"는 기자의 말에 "그건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부인
 - 리 씨 역시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100% 우리가 다 갖고 있다"며 "북에 가면 돈과 물건을 다 빼긴다는 데 그런 일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남측 가족이 건넨 선물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보고...이거 다 가져가라' 하는 가족도 있었다"며 남측 선물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태도를 보임.
 - 이들은 상봉 행사에 참가하면서 북한 당국에 돈을 전혀 내지 않았다면



- 수화학습을 돕기 위해 교재보내기 운동을 추진
 - 32쪽으로 돼있는 '나의 첫 수화책(My First Book of Sign Language)'이란 제목의 이 책자는 가격은 미화 4달러이며, 올해 안으로 모두 1만5천권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투게더-함흥과 함께 수화책 보내기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구호단체 아가페 인터내셔널은 수화책이 북한에 도착하면, 북한 교육성과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이 해당 지역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힘.
 - 현재 북한의 0세에서 9세까지 청각장애인 어린이 수는 5천명에서 1만명 사이로 추정되며, 해당 연령 어린이 가운데 1, 2% 정도를 차지
 - 이번에 북한으로 보낼 예정인 수화교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글자나 단어를 써준 다음 그것을 수화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화 기초 학습서이며, 교재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북한식 수화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지도도 함께 이뤄질 예정
- WFP 영양지원 북 임신부에 큰 도움(자유아시아방송, 3.4)
- 세계식량계획은 임신 후 1년 간 영양지원을 했던 북한 여성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키운 사례를 지난 주말 인터넷 페이지에 소개하면서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이 안정되게 진행되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모금이 필요하다고 호소
 - 세계식량계획이 소개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사는 25살 한옥녀 씨는 임신 3개월 때부터 지난해 10월 출산 후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의 영양강화식품을 지원 받고 있다면서 유엔의 지원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
 - 세계식량계획은 한 씨와 같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북한 여성 수십만 명에게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
 - 영양지원이 시급한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 약 150만 명을 지원하려면 매달 약 83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모금이 부진해서 실제 지원은 계획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원을 호소
 -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6월 말까지 북한의 어린이와 임신부 약 240만 명에 영양 강화식품을 전달하기 위해 약 2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4일 현재 모금은 13% 수준인 약 2천560만 달러에 불과
- 적십자 "북한 8개 지역 식수공급 시설, 다음달까지 완공"(미국의 소리, 3.5)
- 국제적십자사(IFRC)가 최근 발표한 '2013 하반기(3-4분기) 북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평안남북도와 개성의 8개 지역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벌여왔으며, 식수 공급시설 공사의 마무리로 다음 달부터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 받게 될 예정
 - 보고서는 평안북도 동림군과 신양 등 4개 지역의 식수 공급시설은 2013



년 말 완공돼 1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평안북도 박천군과 평안남도 평원군, 평성시 등의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시설 공사가 90% 진행되었고, 개성 시에서도 일부 공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도 4월부터는 추가로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또한 식수 공급시설 공사를 위해 펌프와 전기 기술자, 지역 기술자들이 실무 기술회의에 참석해 관련 기술을 습득했으며, 북한 조선적십자회 식수 위생관리 관계자들이 각 건설 현장을 6~7차례 방문해 관리, 감시
- 국제적십자사(IFRC) 관계자도 식수 공급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해 기술 지원

● 한국 단체, 북 어린이에 방한 부츠 지원(자유아시아방송, 3.6)

- 한국 대북지원 단체 '선양 하나'는 6일 올해 겨울 북한의 고아원, 유치원 소속 어린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방한 부츠를 제공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
- 북한에 유치원을 설립해 주는 등 북한 어린이를 주로 지원해온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어린이들에게 방한 부츠 1만 2천 11켤레를 기부했다고 밝힘.
- 또 "직접 (분배) 현장을 방문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장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강조

● 유진벨 "올 북 결핵 환자 1,500명 치료"(자유아시아방송, 3.5)

- 대북 의료 지원 단체 유진벨 재단이 북한 보건성이 다제내성결핵센터 4곳에 대한 추가지원을 허가해 올해 약 1천 500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이로써 현재 유진벨이 지원하는 결핵 센터는 총 12곳이 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결핵) 환자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유진벨 재단은 지원절차의 효율화와 결핵약 질의 개선, 최신식 결핵 진단장비들의 지원으로 완치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사업을 통한 치료율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봄.
- 하지만, 이 단체는 이러한 큰 성과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전체 다제내성결핵환자의 10~15%만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우려

● 남.북 불교계 북한 어린이 지원 합심(BBS, 3.5)

-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분부는 오는 11일과 12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불교도 연맹 중앙위원회와 회동을 갖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남북 불교계가 힘을 모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남북불교교류 실무협의를 갖기로 결정
- 조계종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지원을



위해 수액과 영양제, 구충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
- 이어 13일에는 천태종과 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도 조불련과 회동을 갖
게되며, 의제에 어린이 지원 사업을 포함할 계획

● 통일부 올해 대북지원 예산 5900여억 원(YTN, 3.5)

- 올해 통일부의 세입·세출 예산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인도
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차원의 지원' 명목으로 식량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 등 모두 59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
- 이는 남북이 합의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는 337억 원 가량 줄어든 규모
-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이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고 쌀과 비료 등 지원 물
품의 규모로 책정되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 따라 액수는 변동되며, 기금
은 일반 예산과 달리 이월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
서 삭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

● 홍사덕 "北에 비료 100만포대 보내기 캠페인"(동아일보, 3.7)

-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6일 열린
민화협 정기대의원회에서 북한이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이 비료라고 지
적하며 "앞으로 북한에 100만 포대 비료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고 밝히며 민화협의 공식사업으로 채택

● 통일부 "현단계 정부차원 대북지원 검토 안해"(연합뉴스, 3.7)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가
능성과 관련, "현재로서는 정부 단독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설명
- 김 대변인은 또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
장이 전날 대북 비료 지원 운동을 제의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를 내용이 아니다"라며 "민화협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차원은 순수
한 인도적 지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
- 그는 다만 "민화협 측에서 그런 구상을 구체화해 신청을 해온다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

8. 북한동향

● '北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은 당과 국가가 맡아하고 있다'며 "당
과 국가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될 조선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고 선
전(3.3, 중앙통신)

● 北, "관광객으로 입국(2.18)하여 반공화국 종교모략책동을 감행한



호주인 '존 쇼트'를 단속,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며 '공화국의 관대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추방하기로 하였다'고 '추방 결정' 보도 (3.3, 중앙통신)

- 존 쇼트는 '광명성절'에 평양의 불교절간을 참관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종교선전물들을 몰래 뿌렸으며 2012년 8월에도 관광객으로 들어와 전동차 안에 종교선전물을 뿌리는 적대행위를 하였음.
 - 이번 행위가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며 관대하게 용서 해주기를 간청하였음.
-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유엔 북한 인권조사팀)'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보고서, 100% 날조"라며 미국은 '정치·경제·사회(선거제도, 빈부격차, 범죄, 인종차별 등)' 등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 인권동토대"라며 미국 등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3.4, 중앙통신)
 - 일본의 '성노예범죄 부정(내각 관방장관 등) 속심'은 '과거 범죄들을 부정, 미화하여 현재의 일본을 과거의 전쟁국가로 변모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는 것'이라며 '과거청산' 촉구(3.4,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의 인권유린범죄가 세계도처에 악성종양처럼 뻗치고 있다'며 '반테러의 간판 밑에 감행하고 있는 군사적 간섭과 전쟁행위는 최악의 국가테러범죄, 최대의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하고 "세계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꿰어앉혀야 할 주범"이라고 강조(3.5, 중앙통신/범람하는 미국의 해외판 인권유린범죄)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